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 광주시·전남도·지역 국회의원, 행정통합 특별법안 맞손

총 8편 23장 312개 조문 300개 특례... 과감한 재정지원·정부권한 지방 이양 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손을 맞잡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양부남·김일이 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광주 지역 민형배·조인철·정진욱·안도걸·박균택·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과 전남지역 박지일·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 국회의원 전원, 광주 시구청장협의회장인 임택 동구청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시·도와 교육청이 함께 만든 특별법 초안을 공유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요 논의 내용은 ▲과감한 재정 지원 ▲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등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담은 특례 반영 방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특별법안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에너지산업 분야에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가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과 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있어서 앞으로 법률안 통과가 최대의 과제"

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모델과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주당 광주전남행정통합특위와 함께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별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기동취재부

## 광주·전남 첨단산업·기업 유치도 파란불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2배 이상 배정 기대  
 AI·에너지·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신성장축 부상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산업구조 재편과 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행정 대통합을 지렛대로 공공기관 2차 이전(혁신도시 시즌2)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항공우주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기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약체(통합협약체)가 이달 말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산업·경제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특례 조항을 대거 담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15일 통합협약체 등에 따르면 특별법이 제정·시행될 경우 수도권과 영남·충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광주·전남의 산업 경쟁력과 기업 유치 여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책적 우대가 핵심이다. 통합협약체는 통합특별시 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배정하고 특별시장이 요청하는 기관을 우선 배치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시 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기존 지원금 외에 5~10% 추가 지원하는 '지방 이전 기업 특례' 도입도 추진된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는 특별법의 핵심 축이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장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당 지역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특례가 명문화된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을 국토 남부권 반도체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한층 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다. 특별시장은 연구개발 거점, 데이터센터, AI 실증 인프라,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를 광역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AI 집적단지 지정 권한도 직접 행사하게 된다.  
 특별시 전역을 'AI 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센드박스'로 지정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신속하게 승인하고 AI·로봇·지능형 시스템 등 신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광주·전남을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재정 특례가 눈에 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매년 세출 예산 10%를 특별시에 지원하도록 하고 해당 기금은 전력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확대 등 법에서 정한 용도로 특별시장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지방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한 특례도 함께 추진된다.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과 관련 설비의 농업시설 인정 권한 이양도 포함됐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수소특화단지 지정, 우주산업투자진흥지구 지정,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도 특별법에 담겼다.  
 첨단전략산업과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적용해 대형 프로젝트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전남 행정 대통합'을 주제로 열린 청와대 조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통합 추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승원 기자

### 제54회

# 강진청자축제

###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2026년  
**2월 21일(토) - 3월 2일(월)**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